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개신교 인권운동의 역사와 그 특징

김명배 (숭실대학교 부교수)*

I. 서 론

II. 개신교 인권이해와 인권운동의 태동

1. 개신교의 인권이해
2. 개신교 인권운동의 태동과 NCCK 인권문제협의회
3. NCCK 인권위원회 창설

III. 제 5공화국 정권의 폭압정치와 개신교 인권운동

1. 제 5공화국의 폭압적 통치
2. 고문-용공조작사건들과 개신교 인권보호운동
3. 개신교의 재소자 인권보호운동
4.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문제와 개신교 인권운동
5. 개신교회의 양심수 석방운동

IV. 5.18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 개신교 인권운동의 특징

1. NCCK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
2. 민주화운동을 보호하는 운동
3. 법률구조활동 대상의 확대 : 기독교인 중심에서 비기독교인으로
4. 엘리트 중심의 소수운동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06>

* 주저자, sjhk1809@hanmail.net

• ABSTRACT •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testant human rights movement after the 5.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Prof. Kim Moungh-Bae(Soongsil University)

The main task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democrats and student activists who were violating human rights in the oppressive governing structure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of Chun Doo-hwan in the 1980s.

This is becaus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Protestant human rights movements in the 1980s. Therefore, this thesis first made it a primary task to investigate the human rights movement of Protestants in the 1980s historically. To this end, in Chapter 2, this paper briefly deals with the Protestant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the history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1970s. And Chapter 3 deals with 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1980s under the oppressive rule of the Chun Doo-hwan regime. Finally, Chapter 4 summarizes the characteristics of Protestant human rights in the 1980s.

Key words: Chun Doo-hwan Regime, Human Rights, Protestantism, Student Movement, 1980s

I. 서론

전두환 정권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진입한 후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주화운동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군, 경찰, 정보기관 등을 동원해 폭압적 통치를 자행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재야민주화세력과 학생운동세력은 잠시 위축되어 소규모의 시위와 유인물 살포 등을 통하여 신군부세력에 항거하였다. 그러나 1980년 2학기 개강과 함께 경희대 재학 중인 여학생이 자신의 동맥을 절단하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한 사건을 계기로 시위의 양상이 대규모로 발전하였고,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되어 교내시위와 유인물 살포 등이 벌어졌다. 시위가 확산되자,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2월 ‘무림사건’을 시작으로 81년 일명 ‘학림’, ‘부림’, ‘아람회’, ‘금강회’ 등의 사건을 일으켜 학생운동을 용공좌경세력으로 몰아 그 핵심세력을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후에 한국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진보적 기독교단체와 가톨릭교회는 구속자 가족들의 탄원에 응답하여 정부당국에 고문중지와 좌경용공 조작을 중단할 것을 탄원하였고, 구속자 석방과 재소자 처우개선, 강제징집 중지 및 양심수 인권보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진보적 한국개신교회는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고문과 탄압을 받고 있는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도회와 학술세미나, 각종 성명서와 인권선언의 발표, 인권주간 행사 등을 개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개신교회의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많이 연구되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것도 대부분 1970년대에 한정되어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연구는 손승호 박사의 학

위논문으로 2017년 출판한 〈유신체제하와 기독교의 인권운동〉이 있다.¹⁾ 그러나 이 책은 1970년대의 기독교계의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다루어 1980년대 개신교계의 인권운동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밖에 인권운동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김명배의 〈한국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²⁾와 전준봉의 〈한국교회 사회운동사〉³⁾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권 중 김명배의 논문은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 그리고 재세례파의 교회와 국가에 관계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을 신학적으로 조망하였고, 전준봉은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경향이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여 엄밀한 의미로 한국개신교의 인권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직 연구가 미진한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의 폭압적 통치 구조 속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인권보호를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을 그 일차적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 2장에서 1970년대 개신교 인권운동의 대두와 NCKK 인권위원회의 창설 과정을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이는 1980년대 인권운동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로 제 3장에서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통치하에서의 개신교 인권운동의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 전두환 정권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무림사건’을 시작으로 ‘학림’, ‘부림’, ‘아람회’, ‘금강회’ 사건 등을 일으켜 무수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구속 고문하였다. 이에 NCKK는 ‘재소자 인권보호운동’, ‘강제징집과 녹화사업문제’, 그리고 ‘양심수 석방운동’ 등을 전개하여 인권수호에 앞장섰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

-
- 1)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2) 김명배, “한국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3) 전준봉, 『한국교회 사회운동사』(서울: CLC, 2012).

서는 1980년대 개신교 인권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1980년대 개신교 인권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개신교 인권이해와 인권운동의 태동

1. 개신교의 인권이해

개신교에서 인권담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해방 후 1957년 <기독교 사상>이 창간되면서부터이다. 개신교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당시 세계교회협의회(이하 WCC)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신학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 사상>을 통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실현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김재준은 “개인을 자유와 평등, 권리의 주체로 제시하면서, 윤리적 요소를 무시한 권력의 횡포와 일인독재체제를 각 개인의 자유와 인간성을 유리하는 행위로 보았다.”⁴⁾ 또한 개신교 진보적 지식인들은 WCC 읍살라 총회의 ‘발전’ 개념에 영향을 받아 1960년대 말까지 ‘인간화’로서의 근대화를 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문화적 정의, 사회적 균형발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 등이 그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기독교의 인권개념을 ‘정교분리’에 입각한 ‘종교의 자유’에서 찾았다. 즉,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통제를 받지 않은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개신교는 인권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⁵⁾

그러나 1970년대 초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 개신교 진보적 지식인들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유신헌법이 통과된 후, 1972

4) 김재준, 『장공 김재준 저작전집』 제 2권 (서울: 장공전집출판위원회, 1971), 418;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51.

5) 손승호, 위의 책, 52-53.

년 12월 이를 반대한 기독교장로회 전주 남문교회 은명기 목사가 구속수감 되고, 1973년 남산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으로 박형규 목사와 학생들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이들은 기독교의 인권개념을 ‘종교의 자유’에서 ‘선교의 자유’로 이해하였다. 이 ‘선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에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 거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 거부’, ‘언론의 자유’를 포함시킨 개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개념을 확장한 것이었다. 또한 NCKK는 1973년 12월 6일 한국 천주교와 함께 인권주간 연합예배를 개최하여 정부의 인권유린 사례를 고발하고, 유신체제가 주장하는 한국적 인권사상을 비판하였다. 이 자리에서 NCKK 총무 김관석은 유신체제가 주장하는 통치자의 시혜적 인권론과 경제성장에 의해 인권이 결정된다는 생존권 중심의 인권론을 비판하며, 인권의 기본 요소인 자유의 회복을 위해서는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개신교 인권운동의 태동과 NCKK 인권문제협의회

은명기 목사 구속사건과 남산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으로 개신교 성직자들과 기독교학생들이 투옥되고, 고문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상황을 목격하자, 개신교 진보지식인들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인권운동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5월 20일 한국 개신교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이정표가 될 ‘한국 그리스도인 신학적 선언’이 발표되었다.⁶⁾ 이 선언은 ‘동기’, ‘국가와 종교’, ‘인권’, ‘교회와 선교’, ‘한국교회의 시국선언들에 대하여’ 등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기’ 부분에서 기독교가 민주화에 임하는 신앙적 근거를 3개 항으로 정리하고⁷⁾, 그 근거 위에 유신체제하의 한국의 상황에 대해 6개 항목에 걸쳐

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서울: 기사연, 1984), 158.

비판하였는데, 이 가운데 2항목에서 ‘현 정권이 인권을 극도로 유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⁸⁾

또한 ‘인권’ 부분에서는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직 그에게 속하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을 수단으로 삼지 못한다. 또한 어떠한 제도도 사람의 동등성을 유린할 수 없다”⁹⁾고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어떠한 정부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 개신교가 군사독재정권과 투쟁하여 수난을 받게 되는 예언자적 소리였다. 이후 이 같은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개신교 진보적 지식인 계층의 인권운동은 NCKK와 각 교단 그리고 지방의 교회들로 확산되어 1974년 5월 4일 NCKK 인권위원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다.¹⁰⁾

우선 1973년 10월 4일 NCKK의 연구위원회는 인권침해에 관한 관심 속에 산하의 국제문제분과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문제협의회를 개최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래서 예장 통합의 김윤식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하여 NCKK는 그해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신앙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 1차 ‘인권문제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NCKK 안에 ‘인권위원

7) (1)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대신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 (2) 우리들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과 더불어 사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믿는다. (3) 우리는 성령이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 같은 신앙에서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념을 밝히고자 한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1)(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250-254.

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404.

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1), 406.

10)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서울: 북코리아, 2010), 132.

회'의 설치와 매년 '인권문제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협의회는 “한국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사명이 인권확립에 있음”을 천명한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¹¹⁾

이 인권선언은 학원, 여성, 노동자, 언론 등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제 문제를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지상의 가치이며”,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는 인권의 확립을 지상의 과제로 믿고”, “교회는 인권확립을 위하여 교회의 자원을 집중시켜 투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¹²⁾ 이 협의회의 의의는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인권’을 단일 주제로 삼아 개최한 최초의 협의회였으며, 참석자들은 NCKK 실행위원회에 인권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도록 건의하여 NCKK가 인권위원회를 창설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¹³⁾

3. NCKK 인권위원회 창설

1973년 12월 10일 NCKK 실행위원회가 인권위원회의 창설을 결의하자, NCKK는 산하의 교회와사회위원회에 인권위원회 회칙초안을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1974년 1월 교회와사회분과위원회는 회칙초안을 실행위원회에 보내어 승인을 요청하였고, NCKK 총무가 각 교단별 총무와 협의하여 교단별 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출하였다. 그리하여 1974년 5월 4일 실행위원회는 임원선출과 회칙을 결의하여 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때 초대 위원장에는 이해영, 부위원장 이태영, 서기에 홍충남이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교단대표 12명, NCKK 3명으로 총 15명이었고, 전문위원으로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1), 296-300.

1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6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1), 298-99; 김명배,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133.

13)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97-99.

는 법조 3명, 학원 1명, 도시산업 1명, 여성 2명 등 총 7명이었다.¹⁴⁾ 인권 위원회는 그 회칙 제 3조에서 ‘본회의 목적이 선교의 자유수호와 인권의 유린 방지 또는 제거’에 있다고 표명하였다. 그리고 제 4조에서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인권옹호를 위한 계몽활동, 2. 국내외의 인권옹호 활동과의 유대관계 촉진, 3. 인권주간행사 실시, 4. 인권문제와 선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조사 및 대책이었다.¹⁵⁾

그런데 이렇게 창립된 인권위원회는 아직 활동에 필요한 조직이나 자금, 그리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1974년 10월 24일부터 26일 개최된 제1회 인권문제협의회에서 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11월 15 활동기금 모금, 구속자 가족 돕기, 영치금 전달, 교도소에 책, 겨울 옷과 담요 보내기, 무의탁 석방자 돕기, 구속자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격려 등을 목표로 후원회를 결성하여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¹⁶⁾

또한, 유신체제의 억압적 법질서 아래에서 NCCK 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사법적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활동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구속된 민주인사들의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던 변호사들을 초빙하여 1975년 2월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때에 자문 위원장에는 이태영 변호사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이병린, 박세경, 한승현, 나석호, 홍성우, 이세중, 유현석, 황인철, 민병국이 수고하였다.¹⁷⁾ 이들은 법률관계의 성명서를 만들거나 구조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실시하였다. 이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일부 변호사는 인권변호사

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65.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칙(1974.5.4.).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4), 58;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105 재인용.

17) 1975년 제 3차 인권위원회 법률자문위원회 회의록(1975. 12. 18).

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1975년 5월 26일 회칙을 개정하여 NCK 산하의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조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회칙 제 3조에 규정된 '선교의 자유 수호'를 삭제하고, '인권문제'의 활동에만 집중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¹⁸⁾ 이는 각 교단별로 파송된 보수적인 실행위원회의 위원들의 간섭을 가능한 배제하고, 조직과 재정적으로 인권수호와 확립을 위한 사역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행위원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1976년 3월에 가서야 인권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별위원회로 전환을 허락하였다.¹⁹⁾

이렇게 인권위원회는 후원회와 법률자문위원회를 두고, 1974년부터 유신체제에 저항하여 투옥된 성직자와 기독교학생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을 위해 인권수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보면, 주요사업으로 '연구지도', '실태조사', '홍보활동', '분야별 지원사업' 등 4분야가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세부사항으로는 '연구지도' 분야에 1. 정책협의회, 2. 전문위원협의회, 3. 분야별 연구협의회 협조가 있었고, '실태조사' 분야에는 1. 자료수집, 2. 검토 및 확인, '홍보활동' 분야에는 1. 매스컴 홍보, 2. 간행물 출간, 3. 강연회, 4. 교회행사, '분야별 지원사업' 분야에는 1. 인력지원, 2. 재정지원, 3. 기타지원사업들이 있었다.²⁰⁾

그런데 무엇보다도 NCK의 인권활동의 중요한 변화는 민청학련 사건 때만 하더라도 구속기독교자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인들만을 위한 인권운동이었으나, 인권위원회가 창립된 후, 비개신교인들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선교적 차원에서 시작된 인권운동이 1976년 긴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칙 개정안(1975. 7. 10).

19)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115.

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업계획(1974).

급조치 9호 사건을 거치면서 인권침해를 당한 비개신교인들의 법률구조 활동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인권위원회가 수감자, 노동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운동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권위원회의 인권운동은 1980년대 들어와 5.18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구속된 수많은 양심수, 고문용공조작 사건, 그리고 재소자 인권보호 활동으로 나타난다.

III. 제 5공화국의 폭압통치와 개신교 인권운동

1. 제 5공화국의 폭압적 통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고, 국민의 저항을 억제하기 위해 경찰, 군, 정보기관 등을 총동원한 폭압적 통치를 시작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이어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의 각종 시위와 농성에 대해서는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사전에 봉쇄하거나 해산을 시켰다. 특히, 명목상으로 ‘대간첩작전’을 위해 창설한 전투경찰은 실질적으로 각종 시위 사건에 투입되어 이들을 진압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군부대도 시위진압에 동원되기는 경찰과 마찬가지로였다. 군은 특공부대와 충정부대를 창설하여 시위진압에 투입하였으며, 국토를 방위하는 신성한 군인의 임무가 아닌 대규모 시위진압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충정훈련’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제5공화국 정부는 유신정권 시절 국가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한 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체제 인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 될 때에는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여 조사와 고문을 자행하는 등 유무형의 탄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제5공화국의 폭압적 통치는 군 정보기관인 보안사를 동원한 민

중 사찰과 연행 조사에서 그 극에 달하였다. 군부독재 정권인 박정희 정권 때만 해도 중앙정보부의 지휘 아래 경찰이 민중을 감시하거나 연행조사 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였다. 그러나 국군 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신군부 세력은 정권 내내 보안사에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허락하였다. 전두환의 정권은 군부대 내의 사찰을 주 업무로 하는 국군보안사에 민간인을 사찰하고 연행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민중탄압에 동원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보안사 내에 민간인을 사찰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민주인사와 학생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사찰하였다. 특히 학생운동권을 감시하기 위해 대학가에 보안사 요원을 상주시키는 등 민간 정보기관인 안기부의 활동을 능가할 정도였다.²¹⁾

제5공화국 정부의 폭압적 통치는 결국 수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나타났다. 경찰, 군, 정보기관 등 폭력적 기구들이 동원되면서 제5공화국 정부에 저항하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거나, 체포 구금되어 재판을 받고 구속되었다. 또한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제적, 수배되어 구속되었다. 단순 가담한 학생들은 강제징집 되었고, 제대 후에도 녹화사업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집권 7년 동안 정치적 이유로 하루 평균 1.6명을 구속하였으며²²⁾, 집권 초기인 1981년부터 1983년까지 3년 동안에는 1천 4백여 명의 학생들을 대학에서 제적시켰다.²³⁾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통치와 잔악성이 극에 달했던 것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용공좌경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야만적인 고문이었다.

21)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III(서울: 돌베개, 1988), 83.

22) 김명배, 『해방후 한국기독교 사회운동사』(서울: 북코리아, 2009), 226에서 재인용.

23) 한용 외 저,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서울: 청년사, 1989), 94.

2. 고문-용공조작사건들과 개신교 인권보호운동

제5공화국이 출범한 후 첫 번째 탄압사건은 서울대 학생운동단체인 ‘무림’사건이었다. 1980년 12월 11일 서울대 교내에서 점심시간에 일부 학생들이 “반과쇼 학우투쟁”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진행하였다. 언론이 서울대생들의 시위를 보도하자, 정부는 이 시위 사건을 서울대 교내 이념 싸클인 ‘무림’으로 지목하고, 이들을 연행 조사하여 그 가운데 10명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정부는 이들을 구속하면서 용공좌경으로 몰아갔는데, 이것이 ‘무림사건’이었다.²⁴⁾

무림사건 이후 학생운동이 다시 반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전국민주학생연맹’(약칭 전학련 또는 학림)이 결성되면서였다. 전학련이 결성되자, 전두환 정권은 치밀한 각본에 따라 ‘전학련’을 <광민사> 대표 이태복을 수괴로 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대학생 13명을 구속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전학련이 대학 제적생과 교회의 선교단체 실무자, 노동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불법집회를 열었다는 것과 <노동의 철학> 등 이념서적을 탐독하여 공산주의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명문으로 연행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이리하여 ‘전학련(학림) 사건’이 만들어졌는데, 구속자 가족들은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 주장하였다.²⁵⁾

부산에서는 1981년 7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부림’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도 <한국경제의 실상과 허상>, <제3세계와 종속이론> 등의 책을 읽고 토론했는데, 정부는 이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전복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구속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VIII)(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851-852.

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874.

하였다. 이들은 연행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고, 이에 구속자 가족들과 NCK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을 탄원하였다.²⁶⁾

충남 금산에서는 1981년 8월 ‘아람회 사건’이 일어났다. 초등학교 선후배들이 회원 김남수의 딸의 이름을 빌려 〈아람회〉라 칭하고 〈씨알의 소리〉를 읽고 시국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당국은 이를 용공사건으로 조작하였다.²⁷⁾ 공주에서도 1981년 11월 공주사대 학생들이 중심이 된 ‘금강회 사건’이 일어났다. 당국은 이들이 〈노동의 역사〉, 〈서양경제사론〉 등을 읽고 토론한 사실을 문제 삼아 반국가단체 조직과 복괴찬양동조 등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등 위반한 혐의로 가담자 9명은 구속하고 3명은 불기소 처분하였다.²⁸⁾

이처럼 용공조작과 고문사건이 발생하자, NCK 인권위원회는 1981년 7월 13일 ‘인권문제 전국협의회’를 개최하고, 학생들과 교회 청년들에 대한 당국의 좌경용공조작은 부당한 처사이며, 정부당국에 고문중지와 양심수의 석방을 요청하였다.²⁹⁾ 그러나 고문이 계속되자, NCK 인권위원회는 이듬해 1월 8일 ‘전학련, 전노련 사건’ 관련 구속자에 대한 고문중지 탄원서를 정부당국에 제출하였고, 1월 20일에는 한국기독교대책협의회를 비롯한 7개의 기독교 단체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학련, 전노련 사건’과 ‘부림사건’ 구속자에 대한 고문중지 탄원서를 전달하였다.

NCK는 정부당국에 탄원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각종학술대회를 통하여 정부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용공조작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NCK는 1981년 7월 9일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로 제1회 에큐메니칼 심

2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873.

2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87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884.

2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874.

포지움을 개최하여 정부의 ‘용공조작사건’을 학문적으로 대응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신대 장일조 교수는 “1970년대 기독교가 소외된 노동자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을 지배층에서 용공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하였다.³⁰⁾ 또한 NCKK 인권위원회는 1982년 10월 서울 반도 유스호스텔에서 ‘복음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문제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도와 성서연구, 발제와 토의 시간을 갖고, 인권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책임져야할 사명으로 확인하는 ‘83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³¹⁾

이상에서 보듯이 제5공화국 정부는 민주화운동세력을 제거하고 통치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81년부터 학생운동을 갖은 고문과 협박을 통해 좌경, 용공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반국가단체 결성으로 몰아 구속하였다. 이에 구속자 가족들은 NCKK를 비롯한 기독교계에 구속자들의 석방을 탄원하였고, 이에 응답하여 개신교계는 NCKK를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인권의 보호를 위해 기도회와 세미나, 인권선언과 인권주간 행사 개최, 각종 성명서를 발표, 정부에 탄원서 제출과 면담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3. 개신교의 재소자 인권보호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구속자와 양심수를 양산하였다. 신군부세력이 부상하는 가운데 1979년 11월 YWCA 회관에서 열린 위장결혼사건, 5.17 계엄확대,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양심수를 급속히 증가시켰다. NCKK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873.

31)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권(광주: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304.

1983년 11월 28일 현재 구속된 자는 총 4백 71명이었다.³²⁾ 재소자들의 숫자가 급증하자, NCCK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회는 가장 먼저 재소자들의 인권보호운동에 착수하였다. 더욱이 1982년 10월 12일 양심수의 교도소 내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던 박관현이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건은 재소자인권보호운동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에 연류 되어 구속된 박관현은 1982년 7월 광주 교도소 내 양심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도소장 면담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그를 징벌방에 가두고 면회자의 접견을 금지하였다. 이에 박관현은 단식으로 항거하였으나 건강이 악화되어 10월 10일 전남대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0월 12일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재소자 박관현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NCCK 인권위원회는 1982년 10월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박관현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현재 수감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는 항의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장관인 배명인은 국회 답변에서 “수감 중 구타하거나 사형수 방에 옮긴 적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법무부 장관이 거짓해명으로 일관하자, ‘한국양심수가족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의 해명을 반박하는 <공개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이 <반박문>은 박관현의 사인이 “부식의 부패, 환경위생과 고문, 구타”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장관의 사과와 교도소 책임자의 파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³³⁾

3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VIII), 958. 이들 가운데 학생은 3백 98명이었다. 사건별로 보면 납민전 사건 26명, 전학련전노련 사건 3명, 부림사건 4명, 금강회사건 1명, 아람회사건 4명, 오송회 사건 9명, 통혁당 사건 2명, EYC성명서 사건 1명, 부산미문화원사건 9명, 광주미공보관폭파사건 2명 등이었다.

3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VIII), 921.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 반박문을 빌미로 ‘양심수가족협의회’ 회장 박용길 장로를 북부경찰서로

재소자 박관현 사망사건이 일어난 후, 각지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인권투쟁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NCCK와 교회는 재소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운동을 전개하였다. 1983년 7월 순천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의 구타로 재소자들이 단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NCCK 인권위원회는 부위원장 이문영과 간사 강구철를 파견하여 교도소장의 사과와 재소자들의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³⁴⁾ 안양교도소에서도 양심수들이 교도관들의 부조리를 문제 삼아 단식을 하자, 이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에도 NCCK 인권위원회는 이문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파견하여 재소자들의 처우개선과 폭력방지를 약속받고 재소자들의 단식을 중단시켰다.³⁵⁾ 이 밖에도 NCCK는 재소자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1983년 9월 1일 수도교회에서 ‘재소자 인권문제협의회’를 개최하여 “교도소방문과 영치금 지원”, “변호인 지원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4.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문제와 개신교 인권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폭압적 강권통치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과 재야인사들의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혔다. 전두환 정권은 반독재민주화운동에 가담한 학생과 재야인사들을 용공좌경으로 몰아 구속시키고 무자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구속시킬만한 분명한 혐의가 없거나 시위에 단순 가담하여 붙잡힌 학생들에 대해서는 조사 후 강제로 군대에 입대시켰다. 심지어 신체검사가 가정형편상 당연히 입영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학생들도 강제 입영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447명의 대학생들이 1981년 11월부터 1983년 말까지

연행하여 조사하고 석방하였다.

3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946.

3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948.

강제로 징집되어 군대에 보내졌다. 그러나 이렇게 강제로 징집된 학생들은 군대 내에서도 ‘특수학적변동자’로 분류되어 항상 군 수사기관의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강제 징집된 학생들은 군 제대 후에 학교에 돌아가서도 소위 ‘녹화사업’의 대상이 되어 비인간적 행위를 강요당하였다. 즉, 이 ‘녹화사업’은 강제 징집된 학생들이 군 제대 후에도 대학에 복학하여 대학가의 동향을 파악하여 보안사에 보고하도록 한 일종의 정보원 활동을 강요한 사건이었다.”³⁶⁾

그런데 이러한 학생강제징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983년 12월 10일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재학 중 강제 징집된 한희철 군의 사망사건이었다. 당시 군 당국은 그의 죽음을 자살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친은 아들의 충상을 확인하고 자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³⁷⁾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들에서 ‘복교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제적학생들의 복교문제해결과 강제징집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특히 “성균관대 복교대책위원회”는 1984년 1월 16일 “강제징집 중지”, “강제징집된 학생들의 복교”, “성균관대 재학생으로 강제징집 되어 사망한 이운성군의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³⁸⁾ 기독교계에서는 ‘기장청년회전국연합회’가 제 25차 총회(1984년 2월 18일)에서 NCKK, 한국가톨릭주교회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미국 의회 등에 강제징집 되어 사망한 6명의 사건을 알리는 호소문을 보내기로 하였다.³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1984년 3월 20일 사망자 6명의 사인을 규명해 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촉구하였다.

강제징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개신교는 물론 가톨릭교회

36) 김정남, 『진실광장에 서다』(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5), 472.

3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VIII), 959.

3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963.

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966.

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연대하였다. 그리하여 1984년 4월 12일 개신교계에서는 KSCF, EYC, 기장청년회전국연합회, 예장(통합)청년회전국연합회, 가톨릭계에서는 대한가톨릭학생전국협의회, 명동천주교회청년단체연합회, 그리고 민주화청년연합 등 8개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사망한 6인의 사인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⁴⁰⁾ 이처럼 개신교회는 가톨릭과 더불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여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의 인권보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5. 개신교회의 양심수 석방운동

전두환 정권은 군부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였고, 이 과정 속에서 다수의 양심수들이 양산되었다. 1983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구속된 시국관련 양심수는 총 471명이었고, 그 가운데 학생은 398명이나 되었다.⁴¹⁾ 특히, 1984년 학원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학생, 노동자, 농민들의 민주화 투쟁이 활발해지면서 양심수가 급증하였다.⁴²⁾ 1985년에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KSCF’, ‘EYC’ 간부들에 대한 불법연행과 구속, 그리고 고문 등이 자행되었다.⁴³⁾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민주화인사들에 대한 구속과 양심수들에 대한 고문이 자행되고,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이 일어나자, 기독교계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고문 및 용공 조작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NCKK

40)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 2권, 372-73.

4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위의 책, 959.

42) 당시 구속된 양심수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19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 19명,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25명,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189명이었다.

4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85한국교회사정』(서울: 민중사, 1986), 87.

인권위원회는 1985년 4월 18일 양심수 석방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인권 문제협의회(6월 2일-5일)를 개최하여 ‘인간들의 악법에 항거하고, 이의 폐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선교적 과제임을 선언하는 ‘85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⁴⁴⁾ 또한 NCKK 인권위원회는 교회가 인권선교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인권주간연합예배(12월 8일-6일)를 전국 각 도시(26개)에서 개최하였다.⁴⁵⁾ 그 밖에도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예장통합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그리고 가톨릭의 정의평화위원회 등이 발표하였다.⁴⁶⁾

1986년에는 5.3 인천개헌집회를 시작으로 민주화인사들에 대한 구속이 계속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5.3 인천개헌집회를 주도한 민통련과 그 산하단체 간부들과 학생, 노동자 등 수십 명을 용공좌경으로 몰아 문익환 목사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을 구속하였다. 또한 그해 10월 28일에는 건국대 농성사건으로 1,290명을 구속하여, 그해 말에는 3천 4백여 명의 양심수가 구속 상태에 있었다.⁴⁷⁾

민주진영에 대한 탄압과 구속으로 감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개신교회는 NCKK를 중심으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NCKK 산하의 인권위원회는 민통련 의장 문익환 목사가 구속되자, 5월 24일 문익환 목사와 1천여 명의 민주인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⁴⁸⁾ 예장(통합) 인권위원회도 5월 23일과 27일 이틀간 한국교회백주년 기념관에서 5.3 인천사태로 구속된 장신대 학생들의 석방을 위한 간담회와 기도회를 개최하였다.⁴⁹⁾

44) ‘85인권선언’, 『복음신보』(1985. 4. 28)

45) ‘인권주간연합예배개최’, 『기독교공보』(1985. 12. 21).

4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85한국교회사경』, 90.

47) 김정남, 『진실광장에 서다』, 557.

48) ‘민주인사 석방요구 성명서’, 『한국일보』(1986. 5. 25).

49) ‘구속학생 석방을 위한 간담회와 기도회 개최’, 『기독교공보』(1986. 6. 7).

한편, NCKK 인권위원회는 전두환 정권 말기적 현상으로 구속과 탄압, 고문 등 인권유린이 극에 달하자, 6월 4일에 '86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에는 고문 등의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중지하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⁵⁰⁾ 또한 한국교회와사회선교협의회도 6월 20일에 <민중운동탄압중지하고 양심수 석방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⁵¹⁾ 이처럼 1980년 중반 전두환 군사정권의 반독재·민주화 운동 진영의 민주화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극에 달하자, NCKK를 중심으로 예장(통합), 기장, 한국교회와사회선교협의회 등 한국개신교계는 구속자들에 대한 당국의 고문중지와 석방을 위한 각종 운동을 전개하였다.

IV. 5.18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개신교의 인권운동의 특징

1. NCKK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

한국교회의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일인독재정권을 선포하자, 한국교회는 신학자와 기독교인 교수 등 '진보적 지식인 그룹'과 젊은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청년학생들이 유신체제에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에큐메니컬 단체인 NCKK를 중심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 '기독교교수협의회', '목요기도회' 등을 조직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사회 참여를 시작하였다.⁵²⁾

1970년대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은명기 목사 사건과 남산 부활절 연합 예배 사건으로 개신교 성직자들과 학생들이 구속되어 갖은 폭행과 고문

50) '86인권선언', 『중앙일보』(1986. 6. 5).

51) '양심수 석방위한 성명서', 『중앙일보』(1986. 6. 21).

52)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4(2012), 67-68.

을 당하자, NCKK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 단체들은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인권운동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73년 10월 4일 NCKK의 연구위원회는 인권문제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사회 속에서 한국교회의 사명이 인권확립에 있음”을 천명하는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⁵³⁾ 1973년 12월 10일 NCKK 실행위원회는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창설을 결의하고, 1975년 5월 4일 NCKK 실행위원회는 인권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조직된 NCKK 인권위원회는 유신체제하에 투옥된 성직자와 학생, 비기독교인들의 인권수호운동에 가장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이 폭압적 통치기구들을 동원하여 민주화인사들과 학생들을 구속 수감하여 갖가지 고문을 자행하자, NCKK 인권위원회는 ‘인권문제 전국협의회’를 개최하여 인권문제를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가야할 사명으로 천명한다. 정부 당국이 용공고문조작 사건, 재소자 인권유린 사건 등을 통하여 민주화 인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고문과 탄압을 자행하자, NCKK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탄압중지와 항의를 담은 서신 발송, 기도회와 세미나, 인권선언과 인권주간 행사, 각종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인권유린을 규탄하였다.

NCKK는 1970년대와 달리 진보적 기독교계 단체들과 연대하여 제5공화국 군부독재정권의 민주화 인사 탄압과 인권유린에 저항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후, ‘한국양심수가족협의회’가 발족하자, NCKK 인권위원회는 이들과 연대하여 재소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1984년에는 NCKK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장(통합)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등과 양심수 석방을 촉

5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1), 296-300.

구하는 〈성명서〉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또한 강제징집과 녹화사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자, NCKK 인권위원회는 강제징집문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KSCF, EYC, 기장청년회전국연합회, 예장(통합)청년회전국연합회, 감리교청년회전국연합회 등 개신교 청년학생단체들뿐만 아니라, 대한가톨릭학생전국연합회, 명동천주교회청년단체협의회 등 가톨릭의 청년학생단체, 그리고 민주청년연합 등과 연대하여 정부의 학생들에 대한 강제징집 중지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⁵⁴⁾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1986년 5.3 인천개헌집회로 민통련 간부를 비롯한 학생과 노동자가 구속되고, 같은 해 10월 건국대 농성 사건으로 1천여 명 이상의 민주화 인사들과 학생들이 구속되자, NCKK 인권위원회는 한국교회와사회선교협의회, 예장(통합) 산하의 장청, 구속자대책협의회 등 10여개 단체 등과 목회자들을 모아 구속자들에 대한 고문중지와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NCKK 인권위원회는 1980년대에 들어와 신교와 구교는 물론 민주화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인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이러한 NCKK의 인권운동은 세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1970년대 중반 인권위원회를 창설한 후 선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기방어 활동한 시기, 둘째 단계는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이후 신체적 자유와 수감자 인권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언론의 자유까지 다룬 정치적 자유의 단계, 셋째 단계는 1979년 유신체제 몰락 후 인권운동이 정치적, 시민적 자유권 운동을 넘어 민중생존권의 수호 차원으로 발전한 단계라는 것이다.⁵⁵⁾

5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85한국교회사정』, 90.

55)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246-247.

2. 민주화운동을 보호하는 운동

1970년대 민주화와 인권운동은 선교의 자유와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획득이 그 목표였다. 이때에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은 그 목표가 뚜렷이 구별이 되지 않는 교집합의 상태에 있었다. 당시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추진하는 진보적 개신교 그룹의 목표는 한국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하는데 있었다. 그런데 1979년 12.12 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1980년대에 군부독재가 계속되자, NCCK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계의 진보적 목회자 그룹과 학생들은 1980년대에도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은 이전의 유신체제보다도 더욱더 폭압적 공포정치를 행하였다. 그 결과 민주진영의 인사들과 학생들이 구속, 수감되어 고문과 인권유린을 당하였다. 이에 NCCK 인권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구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노력하였고, 민주화운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권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민주화운동의 보호자로 NCCK의 인권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우선 민주화운동의 중심세력에 개신교 엘리트층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었고, 재야세력의 상당한 지분을 개신교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NCCK의 인권운동이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NCCK가 세계교회의 굳건한 연대를 구축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⁵⁶⁾ NCCK는 민주화운동 과정 이전부터 이미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호주 등 서방국가의 기독교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정부에 의해 개신교계의 진보적 인사들이 탄압을 받자, NCCK는 세계교회에 교계인사들과 학생들의 인권

56)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240-243.

유린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서방국가들의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정부는 이들 국가에서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WCC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회들은 한국교회의 인권운동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NCKK와 진보적 한국개신교회에 지원하였다.⁵⁷⁾ 이처럼 NCKK와 개신교계 인사들이 세계교회 혹은 국제사회와 맺은 네트워크는 한국교회의 인권운동을 가능케 했고, 인권운동이 민주화운동의 후견 혹은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3. 법률구조활동 대상의 확대 : 기독교인 중심에서 비기독교인으로

19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개신교 목회자들과 학생들이 투옥되면서, 부당한 인권유린과 핍박을 받는 이들을 법률적으로 구조하는 활동이 절실히 요구 되었다. 따라서 NCKK는 1975년 2월에 구속된 민주인사들을 법률적으로 구조할 변호사들을 초청하여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의 NCKK 인권위원회의 법률구조활동은 대상은 주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는 NCKK 인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977년 5월 법률구조활동의 대상으로 비기독교인들을 포함시켰으나, 당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깊게 참여하고 있던 인물들이 대부분 진보적 개신교인들이기 때문이었다.⁵⁸⁾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법률구조활동의 대상이 기독교인 중심에서 비기독교인들로 확대되었다. 제5공화국이 탄생한 후 1980년 12월 ‘무

57) 세계교회협의회와 각국의 교회가 한국의 진보적 개신교회와 인사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정부의 탄압 등의 사유로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1978년 NCKK의 공식적 보고서에 의하면 총수입이 158,460,000원인데 이 중 특별수입이 110,570,000원으로 대부분 세계교회의 지원금이였다. 손승호, 위의 책, 223.

58) 손승호, 위의 책, 242.

람' 사건으로 시작으로 1981년 '학림' 사건, '부림' 사건, '아람회 사건', '금강회' 사건이 터지면서 연루된 학생들에 대한 용공조작과 고문사건이 이어졌다. 이에 NCKK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이들에 대한 고문중지와 구속자의 석방을 탄원하였다. 또한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82년에는 박관현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1983년에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다수의 양심수가 양산되고, 1984년에 민정당사 점거농성사건,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등 일련의 시국사건으로 대학생들이 구속되자, NCKK 인권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을 본격화하였다. 1986년도에도 5.3 인천사건으로 민통련 간부들과 학생, 노동자와 건국대 사태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구속되자, 기독교 단체는 물론 구속자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이들에 대한 법률구조활동에 나섰다.

이처럼 1980년대에 들어와 NCKK 인권위원회의 법률구조활동의 범위와 수가 급속히 확장되었으며, 특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했던 1970년대와는 달리 전두환 정권의 폭압정치로 탄압을 받아 구속되어 고문을 당하고 있던 비기독교계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4. 엘리트 중심의 소수운동

1970년대 개신교 민주화운동은 진보적인 일부 소수의 목회자와 신학자, 기독교학생, 그리고 몇몇 교회 중심의 신앙고백 차원의 운동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개신교회의 민주화운동은 점차 다수의 교회와 교단,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 성숙해 나아갔다.⁵⁹⁾

59) 김주한,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한국개신교가 한국근현대의 사회, 문화적변동에 끼친 영향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07;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

그러나 민주화운동이 1970년대 소수 엘리트 운동에서 1980년대 대중 운동으로 성숙해 간 것과 달리 인권운동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 유신체제하에서 NCKK 인권위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은 각 교단이 파송한 소수의 인사들이었다.⁶⁰⁾ 1974년 인권위원회가 창립될 당시 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매우 소수였고, 위원장을 맡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건강이 좋지 않은 이해영 목사가 맡기도 하였다. 또한 인권위원을 맡았던 사람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하였다. 예장(통합)의 경우,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1970년대 중반 조남기, 김종대 2인이 파송되어 활동하였고, 1980년대에 예장(통합)은 이들 2명 이외에 금영균을 더 파송되어 3인의 인권위원이 활동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위원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신변의 위협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⁶¹⁾

특히, 1970년대 유신체제는 NCKK는 물론 도시산업선교회, KSCF, SMCO 등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깊게 참여하고 있던 기독교단체들을 용공으로 몰아 관계자들을 구속시켰다. 더욱이 전두환의 제5공화국 군사정권은 유신체제보다도 더 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을 용공좌경으로 몰아 구속 수감하였고, 온갖 고문과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NCKK는 <인권소식>을 발행하고, 기도회와 각종 강연회, 인권주간행사와 연합예배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와 교회에 뿌리를 내린 반공주의는 한국교회로 하여금 인권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명백한 한

사』, 321.

60) 인권위원회의 초대 위원은 다음과 같다. 교단대표 12명:예장(조남기, 김종대), 기감(박설봉, 조홍벽), 기장(이준목, 이해영), 구세군(김순배, 유창복), 성공회(홍충남, 이인근), 복음교회(조용술, 오충일). NCKK 3명(총무 김관석, 교회외사회위원장 강원용, 연구위원장 공석), 전문위원: 법조(한승헌), 언론(양호민), 학원(김용준), 도시산업(조지송), 여성(이태영, 이우정).

61)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253.

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NCCK의 인권운동은 회원교회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엘리트 중심의 소수의 운동으로 계도화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권운동이 소수의 엘리트 운동으로 제한되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인권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의 배타적 태도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참여한 인사 가운데 일부를 회유하여 정보를 캐내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권운동의 참여자들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인권운동의 확산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⁶²⁾

V. 나가는 말

한국개신교 진보진영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선도적 공동체였고, 인적자원을 제공한 풀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반독재·민주화운동은 곧바로 인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개신교계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반독재·민주화 운동이 곧 인권운동으로 그리고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개신교 진보적 지식인 계층의 인권운동은 NCCK가 중심이 되어 인권문제협의회를 구성하고, 1974년 5월 4일 NCCK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 후 NCCK 인권위원회는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였다. 구속자 가족들과 연대하여 기도회와 강연회를 개최하고, 정부당국에 구속자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인권주간행사와 연합예배를 실시하였다.

특히, NCCK 인권위원회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폭압정치로 1980

62) 손승호, 위의 책, 255.

년 12월 ‘무리’ 사건, 1981년 ‘학림’ 사건, ‘부림’ 사건, ‘아람회 사건’, ‘금강회’ 사건 등 일련의 고문과 용공조작 사건들이 일어나자, 직접 정부에 항의하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1982년에는 ‘박관현 사건’을 계기로 재소자 인권보호와 양심수 석방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83년에는 ‘강제집금과 녹화사업문제’, 1984년에는 각종 점거농성사건 등 일련의 시국사건에 개입하여 인권이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섰다.

이러한 1980년대의 개신교계의 인권운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신교계의 인권운동은 NCKK의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었다. 즉, NCKK 인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을 규합하여 전개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1980년대 개신교계의 인권운동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민주화운동을 보호 내지 후견하는 운동이었다는 점이다. NCKK 인권위원회는 세계교회와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여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을 보호 내지 후견해 주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1980년대에 들어와 법률구조의 대상을 기독교인 중심에서 비기독교인들로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기층민중으로 대중화 하면서 필연적으로 나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NCKK의 인권운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CKK의 인권운동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소수의 진보적 기독교 엘리트층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당시 한국사회와 교회가 반공주의에 매몰되어 인권운동이 한국교회 저변에 확대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인권운동가들의 배타성도 인권운동이 대중화되고 확장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명배. “한국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서울: 북코리아. 2010.
- 김명배. “민주화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4(2012), 67-68.
- 김주한. “6월 민주항쟁과 기독교.” 한국신학연구소 편. 『한국개신교가 한국근현대의 사회, 문화적변동에 끼친 영향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07.
- 김정남. 『진실광장에 서다』.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5.
- 김재준. 『장공 김재준 저작전집』제 2권. 서울: 장공전집출판위원회. 1971.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 2권』. 광주: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III. 서울: 돌베개. 1988.
-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 전준봉. 『한국교회 사회운동사』. 서울: CLC, 2012.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한국교회 인권운동 3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I).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0년대 민주화운동』(VIII).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94.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업계획(1974).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칙(1974.5.4).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회칙 개정안(1975. 7. 10).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제 3차 법률자문위원회 회의록(1975. 12. 18).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서울: 기사연. 198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85한국교회사정』, 서울: 민중사, 1986.

한용 외 저, 『80년대 한국사회와 학생운동』, 서울: 청년사, 1989.

『기독교공보』(1985. 12. 21).

『기독교공보』(1986. 6. 7).

『복음신보』(1985. 4. 28).

『중앙일보』(1986. 6. 5).

『중앙일보』(1986. 6. 21).

『한국일보』(1986. 5. 25).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8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06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1980년대 전두환 군부독재 시기 폭압적 통치 구조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던 재야민주인사 및 학생운동세력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 개신교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는 지금까지 1980년대 개신교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1980년대 개신교의 인권운동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일차적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제2장에서 개신교의 인권이해와 1970년대 인권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다루었다. 그리고 제3장에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통치하에서의 개신교 인권운동의 역사를 다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1980년대 개신교 인권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주제어: 전두환 정권, 인권, 개신교, 학생운동, 1980년대.
